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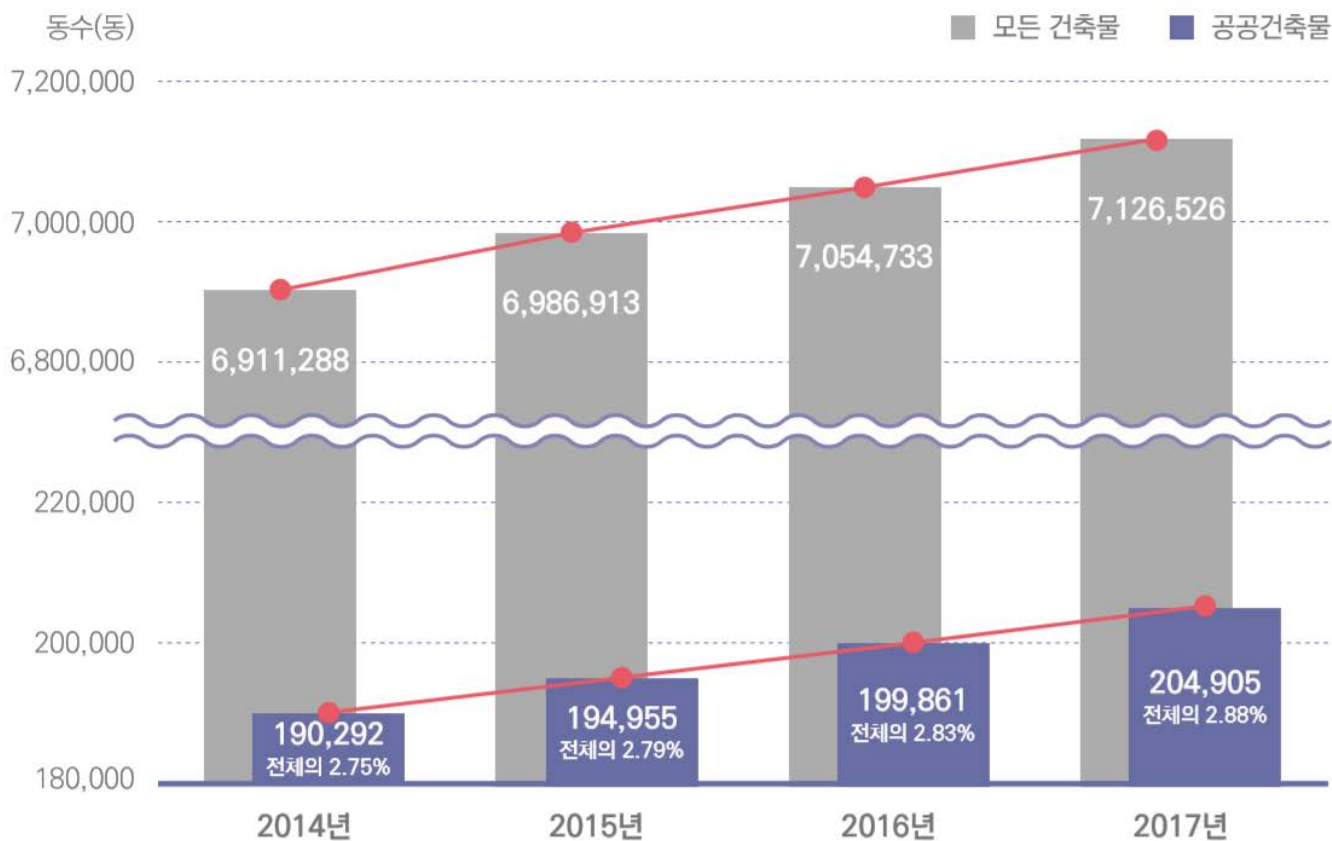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 현황

2019. 07. 16.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방대혁

전국 공공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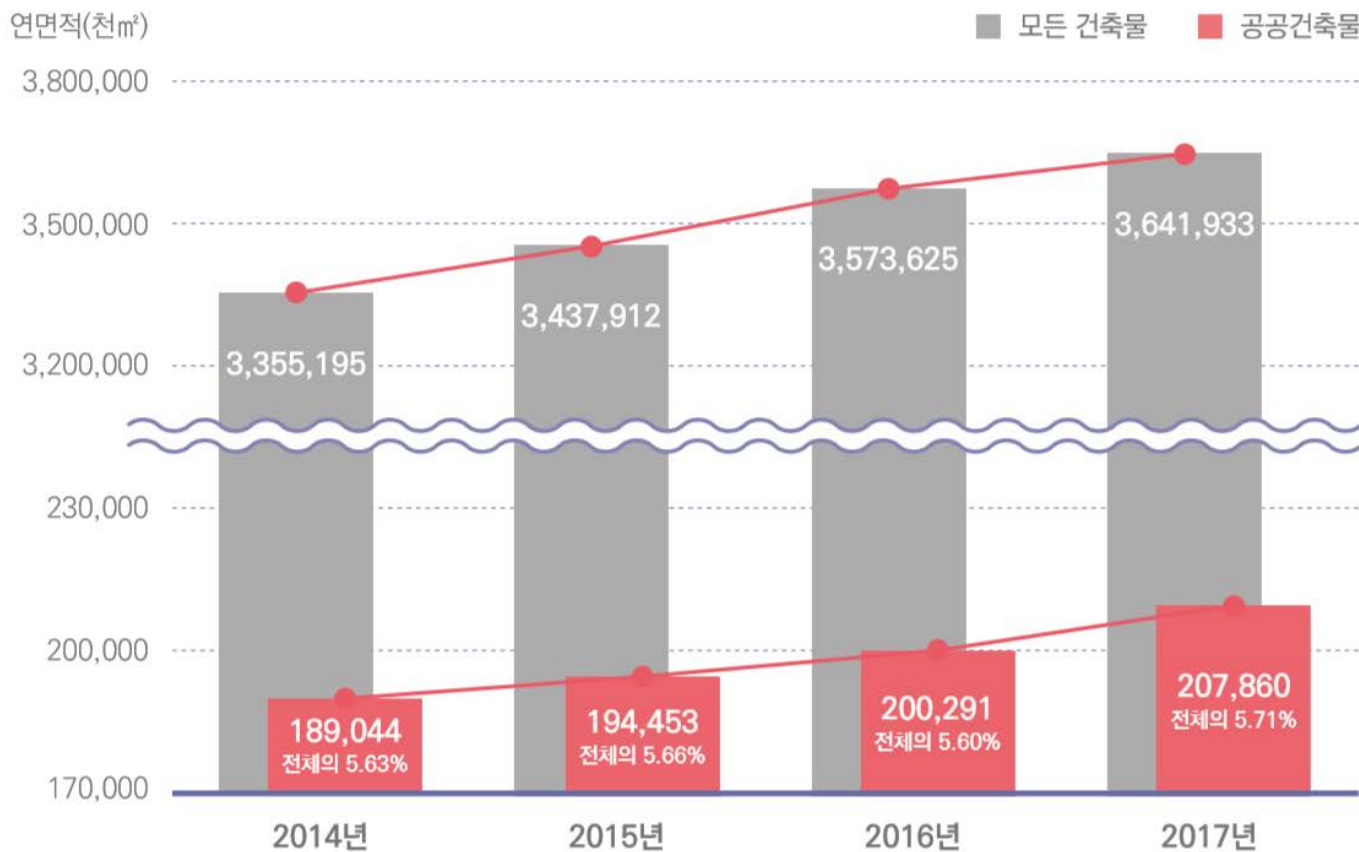
204,905 공공건축물 동수



| 전국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동수 |

전국 공공건축물 현황

207,860,000m² 공공건축물 연면적



소유주체별 현황

55.2% 공공건축물 중 국가 소유 건축물 비중

소유주체별 공공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2017년)

구분	동수(동)				연면적(천㎡)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합계	190,292	194,955	199,861	204,905	189,044	194,453	200,291	207,860
국유	96,255	101,938	107,183	113,121	99,925	105,643	111,524	118,964
도유	41,094	40,622	40,046	39,379	60,443	60,198	59,924	59,791
군유	50,029	49,294	49,422	48,848	25,829	25,562	25,600	25,552
다중소유*	2,914	3,101	3,210	3,557	2,847	3,050	3,243	3,554

* 건축물의 소유주체가 국유·도유, 국유·군유, 도유·군유, 국유·도유·군유인 경우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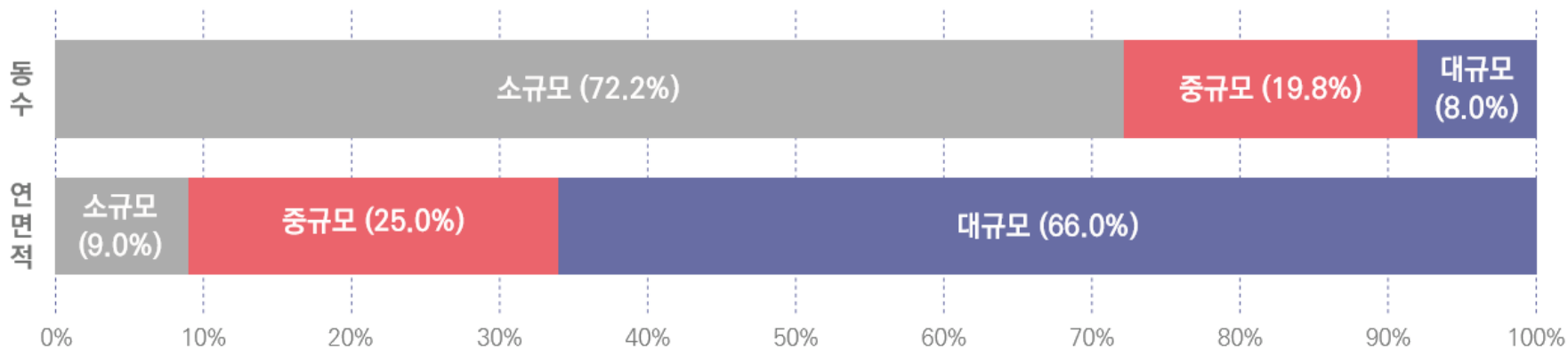
공공건축물 용도 현황

공공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 상위 10개 용도(2017년)

순위	용도	동수(동)	비율	순위	용도	연면적(천㎡)	비율
합계		204,905	100.0%	합계		207,860	100.0%
1	제1종근린생활시설	41,492	20.2%	1	교육연구시설	86,039	41.4%
2	교육연구시설	36,744	17.9%	2	업무시설	22,511	10.8%
3	단독주택	27,954	13.6%	3	교정 및 군사시설	17,912	8.6%
4	교정 및 군사시설	22,315	10.9%	4	용도 미기재	15,402	7.4%
5	제2종근린생활시설	10,021	4.9%	5	제1종근린생활시설	12,672	6.1%
6	노유자시설	9,206	4.5%	6	문화 및 집회시설	9,419	4.5%
7	업무시설	8,828	4.3%	7	운동시설	5,390	2.6%
8	창고시설	7,998	3.9%	8	노유자시설	5,019	2.4%
9	용도 미기재	7,966	3.9%	9	자원순환시설	3,818	1.8%
10	문화 및 집회시설	5,275	2.6%	10	제2종근린생활시설	3,035	1.5%
그 외 용도		27,106	13.2%	그 외 용도		26,643	12.8%

공공건축물 규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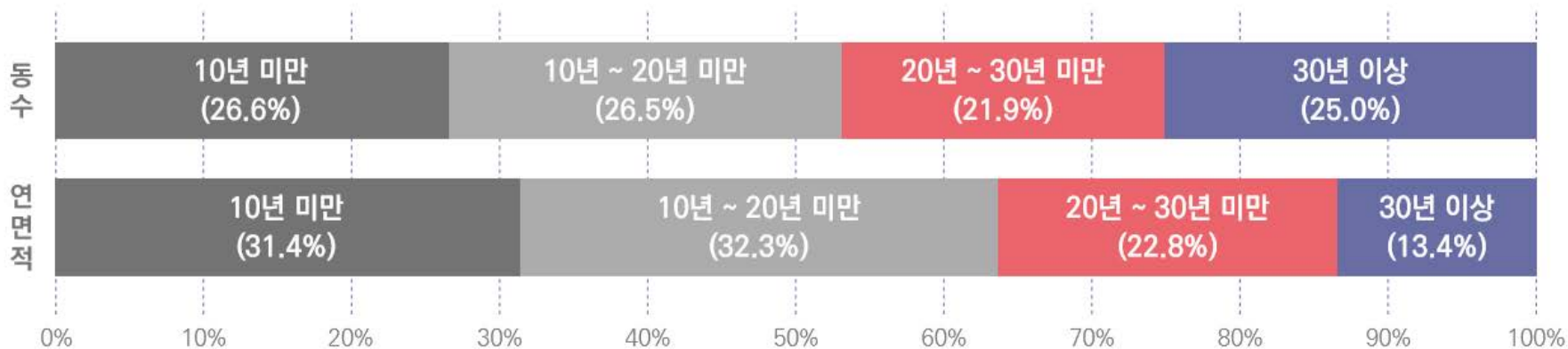
10동 중 7동 소규모(500㎡) 공공건축물 비중



| 규모별 공공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 |

공공건축물 노후도 현황

46.9% 2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 비중



| 노후도별 공공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 |

공공건축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장소”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구청사, 시청사, 법원, 세무서, 경찰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연장,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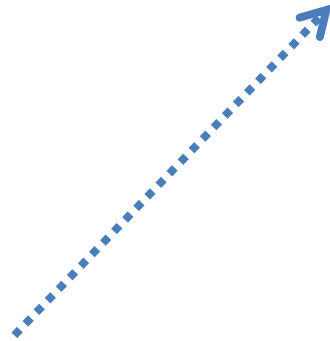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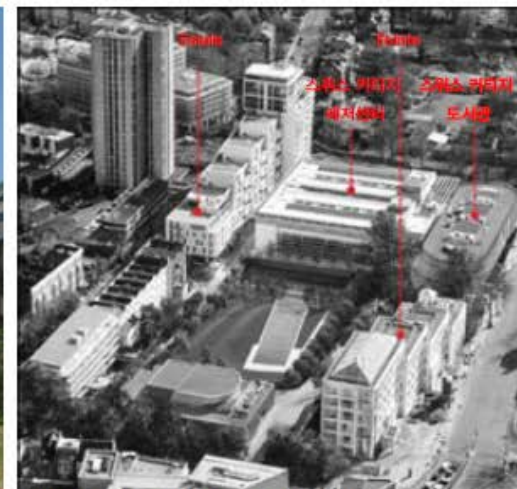
“주민의 커뮤니티 거점”

공공서비스의
제공 장소



영국 런던 Swiss Cottage

1960년대 건설된 구도서관을 정비하여 문화 및 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거점으로 탈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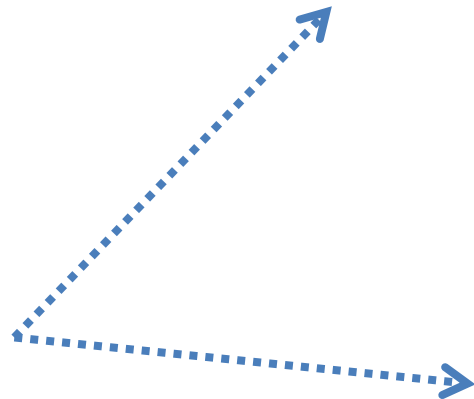
스위스 커티지 도서관 주변지역 조감도(상)



공공건축은...

“주민의 커뮤니티 거점”

공공서비스의
제공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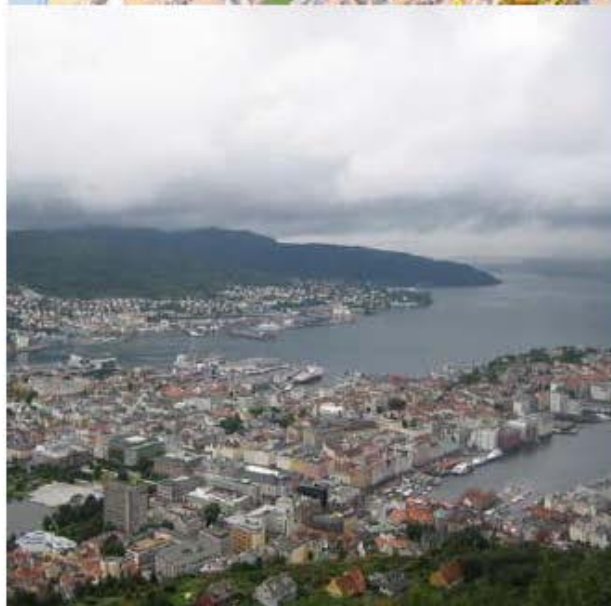
공공건축은...

“지역의 관광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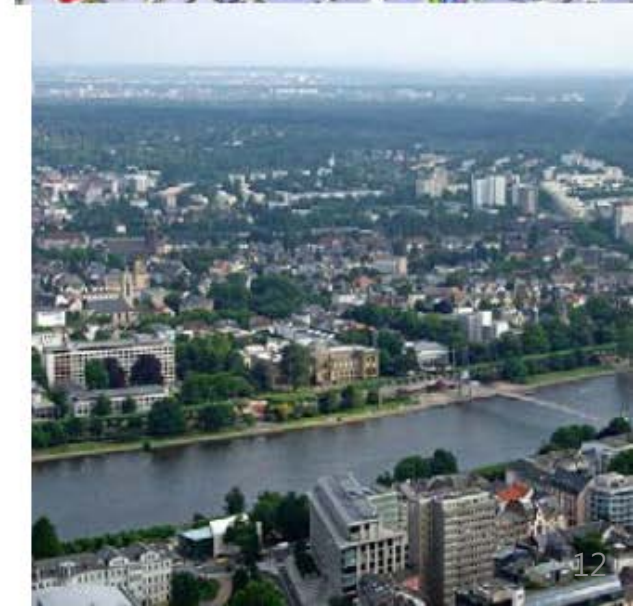
바르셀로나



베르겐



프랑크 푸르트



일본 히로사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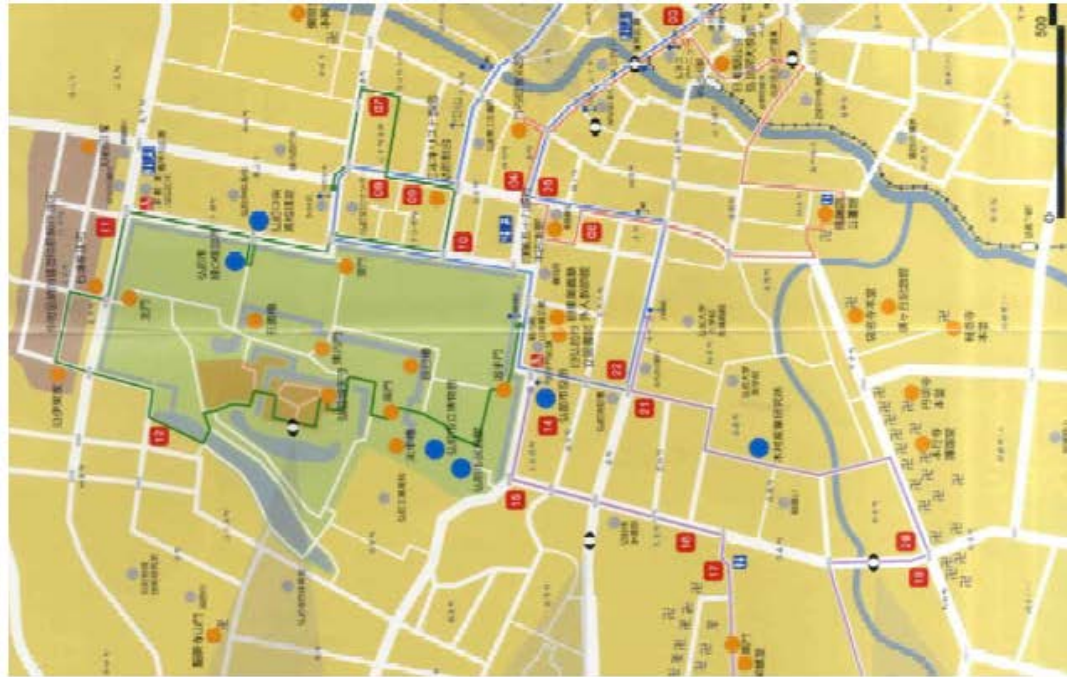
근대 역사문화 자원을 공공건축으로 활용하여 공공건축물 중심의 관광루트 개발



가각 광장



오테몬 광장 - 도서관



시민정보 교류센터



신문보급소 - 시민공간 제공



시민정보 교류센터



근대건축 리노베이션-박물관



시민참가 센터



역전 상점가 정비

공공건축은...

“주민의 커뮤니티 거점”

공공건축은...

“지역의 관광명소”

공공건축은...

“도심 활성화의 촉매”

공공서비스의
제공 장소

```
graph LR; A[공공서비스의 제공 장소] -.-> B["주민의 커뮤니티 거점"]; A -.-> C["지역의 관광명소"]; A -.-> D["도심 활성화의 촉매"]
```


영국 버밍엄 시티센터

오래된 시청과 그 주변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업무, 상업, 숙박, 문화시설로 복합 재생

- Brindleyplace : 민간자본 유치
업무, 상업, 숙박, 문화시설 복합재생



- 공공건축 자산을 활용한 갤러리 광장



- 창고이전적지의 민간복합개발 추진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재생



- 1970년대 시청 리노베이션, 도서 차량중심공간→ 공공광장 정비

과대·과다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사회적 비난 초래



획일적·권위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도시이미지 형성에 지장



부적절한 입지 선정 및 설계로 인한 시설이용 불편 초래



기획업무의 부실

- 기획업무는 공공건축의 적절한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나아가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나 단순 행정업무로 부실하게 수행
- 기획업무가 예산편성에 치우친 단순한 검토수준에 그쳐 공공건축의 효율성, 이용편의성, 공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

이전신축 전의

○ 현 동사무소는 건물이 험소하고 노후되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자치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워
○ 이전부지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확정 건축하고자 함

■ 필요성

○ 인구수 증가 등이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공간은 27.7평으로 협소
○ 통장 및 사회단체 회의시 회의장소가 없어 [redacted] 등 이용
○ 동 정사가 25년 경과된 노후한 건물(후기시 누수, 단열 파손 등)

■ 지역 현황

○ 면 적 : 3.45km² (시 전체의 5.3%)
○ 행정구역 : 41동 264반
○ 인 구 : 12,572세대 / 35,508인구 (남 17,895 / 여 17,613)
○ 세 비 단 : 2개중대 2,090명

■ 현 형사

○ 위 치 : [redacted]
○ 연 면 적 : 518m² (157평, 지하1~지상2층)
○ 준 공 : 1980. 8.28 (25년 경과)
○ 주민주거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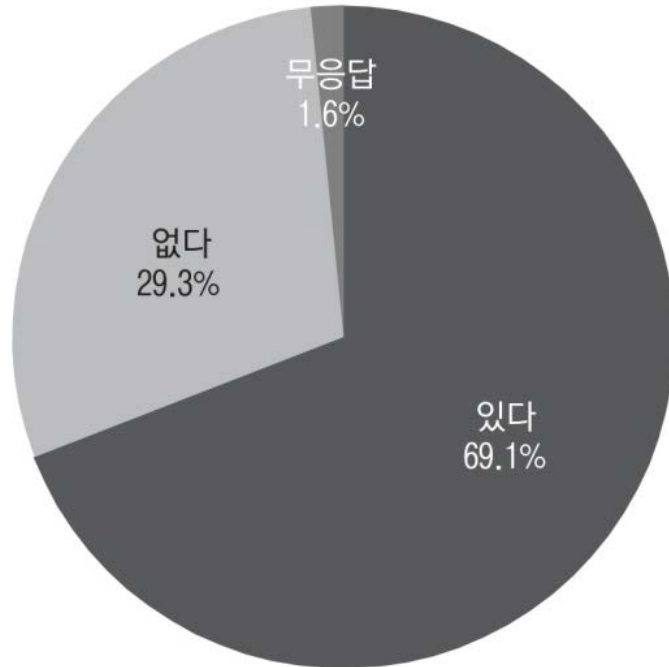
시설	면적(평)	용도
다목적회의실	18 ^평	단체회의, 노년회의, 영어회화
컴퓨터교실	8 ^평	인터넷반 등 7개반

■ 후보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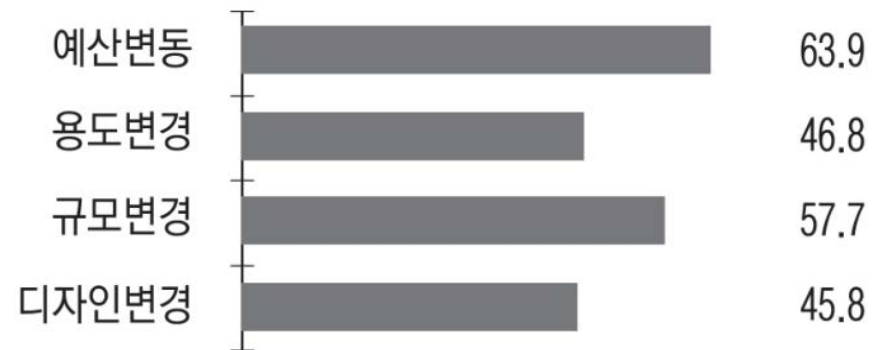
○ 시장님께서 지난 10월31일 3개 후보지중 제1후보지인 [redacted]
[redacted] 현지확인후 결정

〈지방자치단체 기획문서 -신축 사업〉

설계단계의 비밀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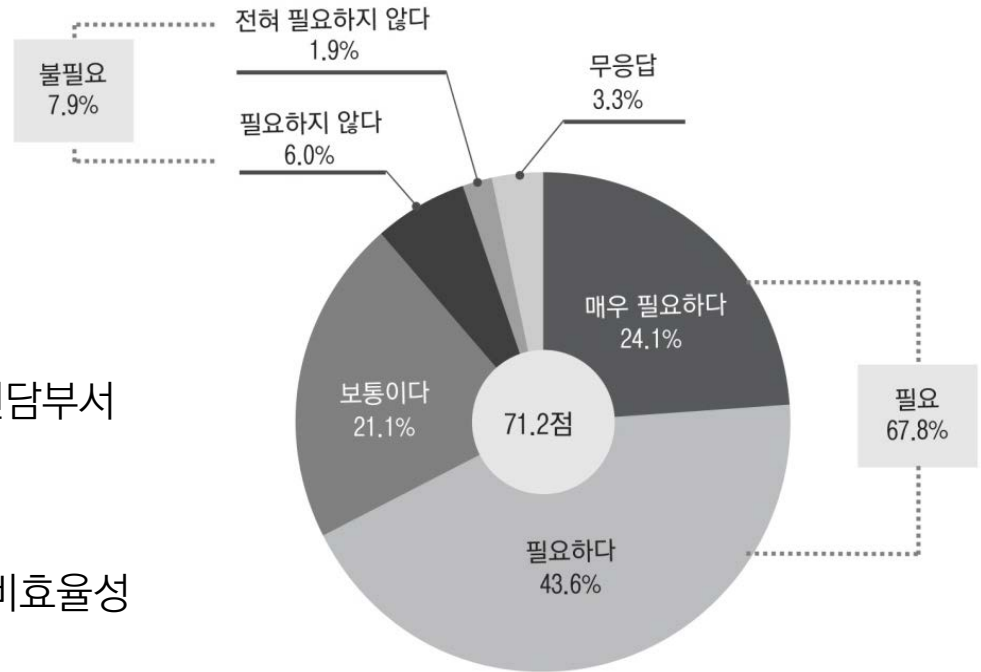
〈계획변경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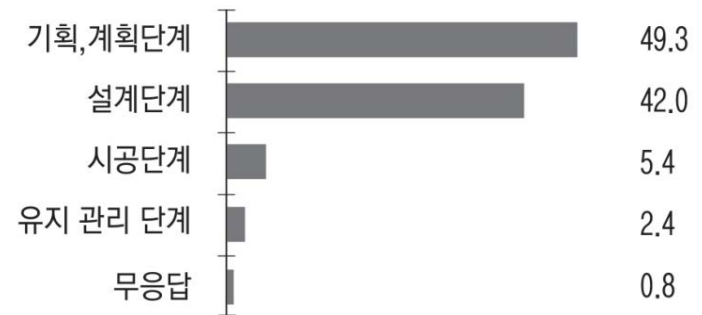
〈계획변경의 원인〉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부족

- 중앙부처 총 40개 기관 중 공공건축 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가 50% (2011년 기준)
-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조직 운영으로 업무 비효율성 초래
-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내 건축도시관련 인력부족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 관련 부서의 평균 건축직 1.1명)
- 순환보직으로 업무연속성 및 노하우 축적 불가



〈공공건축 기획을 지원할 기구의 필요성 파악〉



〈공공건축 조성과정 중 지원이 필요한 단계〉

성과관리 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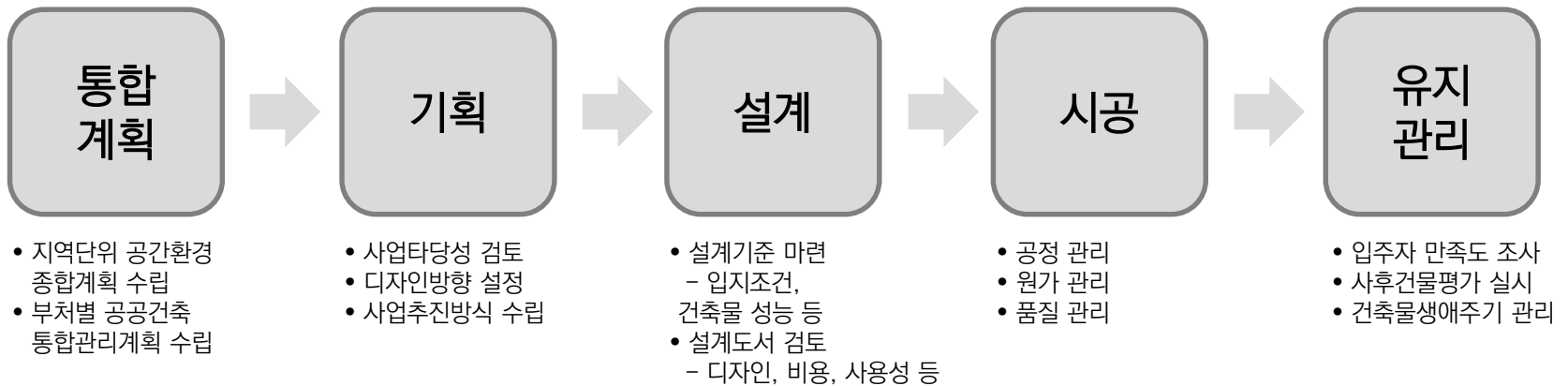
- 95%정도의 사업이 전 단계에 걸쳐 객관적인 검토나 평가 없이 진행
- 준공 이후 사후평가를 거치는 사업은 전체의 0.5%에 불과

사업 (공사)비		50억 미만	50억원~ 100억원	100억원~ 200억원	200억원~ 300억원	300억원~ 500억원	500억원이상	근거법
공공 건축 비율 (16년 기준)	건수	94.4% (9,015건)	3.4% (327건)	1.2% (110건)	0.6% (58건)		0.4% (40건)	-
	공사비	36.0% (5조472억)	14.4% (2조1,863억)	9.7% (1조4,795억)	12.4% (1조8,912억)		27.4% (4조1,679억)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	×	×	×	×	●	국가재정법
타당성조사 (사업비 및 공사비)		×	×	×	×	×	● (예타대상 면제)	지방재정법 건설기술 진흥법
투융자심사 (사업비)		● (40억원미만 자체심사)	● (시/도심사)	● (중앙심사)	● (중앙심사)	● (중앙심사)	● (중앙심사)	지방재정법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공사비)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사비)		×	●	●	●	●	●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설계 적정성 검토(사업비)		×	×	×	●	●	●	국가재정법
경제성검토 (공사비)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사후평가 (공사비)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 기획력 강화

» 전문적이며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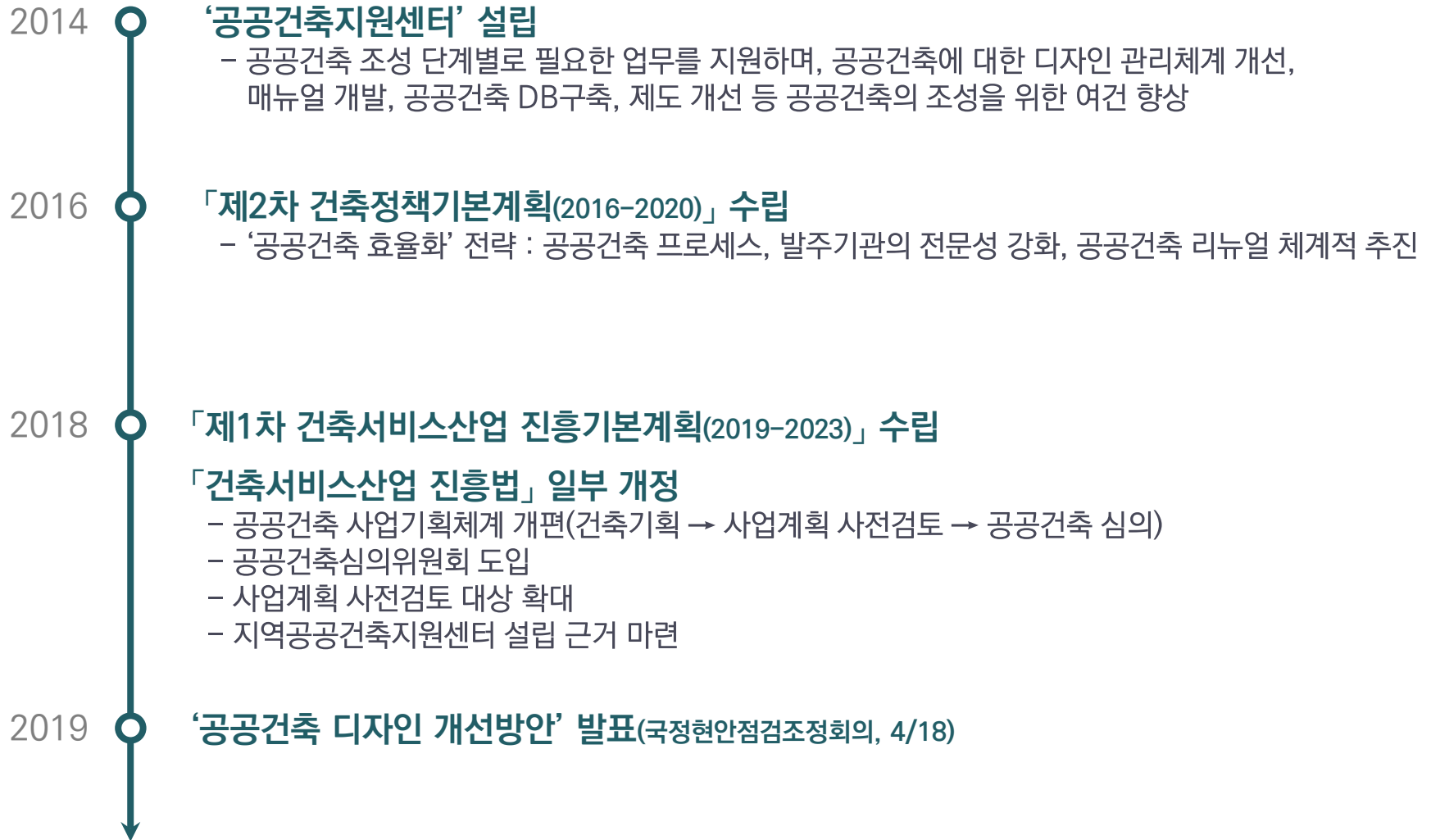
» 건축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 관리



공공건축 정책의 추진경위-1



공공건축 정책의 추진경위-2



「건축기본법」 제정 (2007)

■ 제정 목적

-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 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
 1.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조성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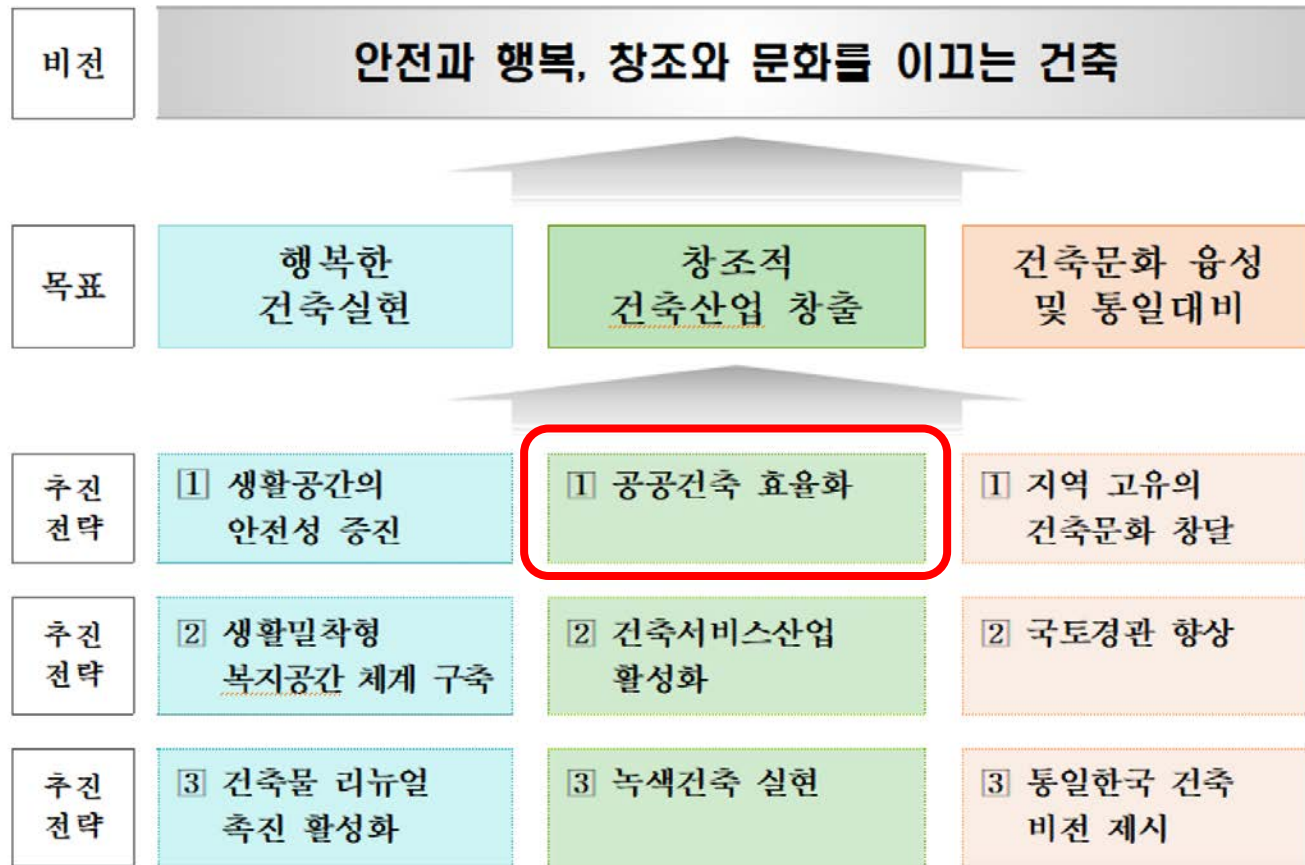
- (제7조~제9조)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등
- (제10조~제12조)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제19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등
- (제21조~제23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민간전문가의 참여 등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16-2020)

「건축기본법」 제 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
- ③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16-2020) : 공공건축 효율화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16-2020) : 공공건축 효율화

1.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 (사전기획업무 강화) 공공건축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 확대
- (성과관리체계 구축) 기획단계~이용단계의 평가·관리 제도를 연계하여 총괄관리
- (총괄조정체계 구축) 각 부처별 공공건축 제도 및 조성정책의 연계 및 조정, 공공건축 물 발주에 관한 통합 기준 마련, 정보 일원화 체계 구축

2.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확대) 전담부서 부재 및 전문인력 부족 지자체 대상 지원
- (공공건축 업무 지원체계 강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지원·대행 기능 확대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지역의 공공건축 사업 지원업무 수행
- (지자체 공공건축 발주부서 전문직 확대) 지역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채용기회 확대
- (예산책정 지원체계 구축)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의 예산편성 등 지원

3. 공공건축 리뉴얼 체계적 추진

- (리뉴얼 진단) 준공연도, 재난안전성, 사용성 등 건축물의 리뉴얼 관련 현황 파악
-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공공기관별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건축디자인기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건축기본법」 제 21조 (건축디자인기준의 설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을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포함사항

1.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건축디자인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 과정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기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 목적

-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

■ 기본 방향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간 또는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의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

■ 민간전문가 참여의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업무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디자인기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 건축디자인 단계별 기준

사전조사 및 사업관계자 의견 수렴

건축·도시 관련 행정담당자,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지역 전문가 등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사업계획 수립

사전조사결과와 사업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비전, 목표, 규모, 사업추진 방향 등을 구체화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설계 발주방식 결정

수주실적과 저가입찰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식보다는 설계공모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건축가나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되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기획업무 의뢰 및 사전검토의 실시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설계발주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내실있는 기획업무를 위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질의 설계안 구현

설계공모 등을 통해 당선된 공모안의 우수한 디자인이 사업기간 단축이나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훼손되지 않고 양질의 설계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관계자들은 노력해야 한다.

» 민간전문가

「건축기본법」 제 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 따른 자격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대통령령에 따른 업무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 설립 목적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리적 토대로서,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의 원천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경쟁력 향상의 요소로서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

■ 주요 기능

- 건축·도시환경의 공공성 및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 건축·도시 디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책 수립 및 건축·도시공간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 건축·도시공간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연구
-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 참여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 건축·도시공간 및 건축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관련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08~)

■ 설립 목적

- 건축분야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 조정 업무 수행

■ 주요 기능

-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2013)

■ 제정 목적

- 건축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주요 내용

- (제5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8조~제10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표준화 기반조성 등
- (제13조~제20조)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 (제21조~제24조) 공공건축물의 품격제고를 위한 설계공모 활성화, 설계의도 구현,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지원센터 등
- (제25조~제31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건축진흥원 설립,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등

» 일정 규모 이상 및 용도 해당 건축물의 설계공모 의무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
-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는 설계공모 적용을 의무화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사업에 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설계공모

» 일정 규모 이상 및 용도 해당 건축물의 설계공모 의무화

건축물 용도	설계비 추정가격	발주 방식			설계공모 의무적용 제외절차
		설계공모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제16호, 제27호	1억 원 미만	○	○	○	-
	1억 원 이상~고시금액 미만		○(PQ)		
	고시금액 이상~5억 원 미만	●	×	×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통해 비적용 대상 인정
	5억 원 이상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적용 대상 인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	1억 원 미만	○	○	○	-
	1억 원 이상		○(PQ)		

● : 의무적용, ○ : 선택적용, × : 적용불가,

○(PQ) :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적용)

»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조성 기획 단계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적정 규모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계획하고 발주 방식을 포함한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디자인 관리체계를 제시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4조 (공공건축 지원센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_건축도시공간연구소(14.06 지정)

법정업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조성관련 자문응답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업무

기본구상 및 기획 지원

설계공모 운영 지원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지원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연구업무

공공건축 관련 기준 및 사례 연구

공공건축 관련 제도개선 연구

공공건축 관련 매뉴얼 개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2018)

→ 건축기획 개념 명문화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 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건축기획을 수행하고,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現 공공건축지원센터(국토부장관 지정) 외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설계공모(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 동법 시행령 개정(19.01.15 개정, 20.1.16. 시행)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 설계비 2.0억원 이상 사업에서 설계비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 건축기획 개념 명문화

→ 건축기획 개념 명문화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 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

■ 주요 내용_「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건축기획을 수행하고,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주요 내용_「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現 공공건축지원센터(국토부장관 지정) 외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내용_「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 설계공모 대상 확대

→ 설계공모(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 동법 시행령 개정(19.01.15 개정, 20.1.16. 시행)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 설계비 2.0억원 이상 사업에서 설계비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

■ 주요 내용_「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말한다.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2019)

- 제7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19.04.18. 국무총리 주재)에서 범 부처 차원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보고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활용
- 설계공모 적용 대상 확대 및 공모방식 다양화
- (가칭)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추진
- 5개 부처사업 디자인 개선 추진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화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2019)

→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 총괄·공공건축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발주기관 역량 보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주요 내용

총괄·공공 건축가 성공사례 확산

-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배포 (~11월)
- ◆ 전문가 DB 구축(6월), 민간전문가 시범사업 추진(5월, 8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선정)

발주기관 지원정책 강화

- ◆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기간(現 30일) 단축, 검토수준 향상
- ◆ 지역개발사업 주무부처의 모니터링, 디자인컨설팅 등 관리책임 강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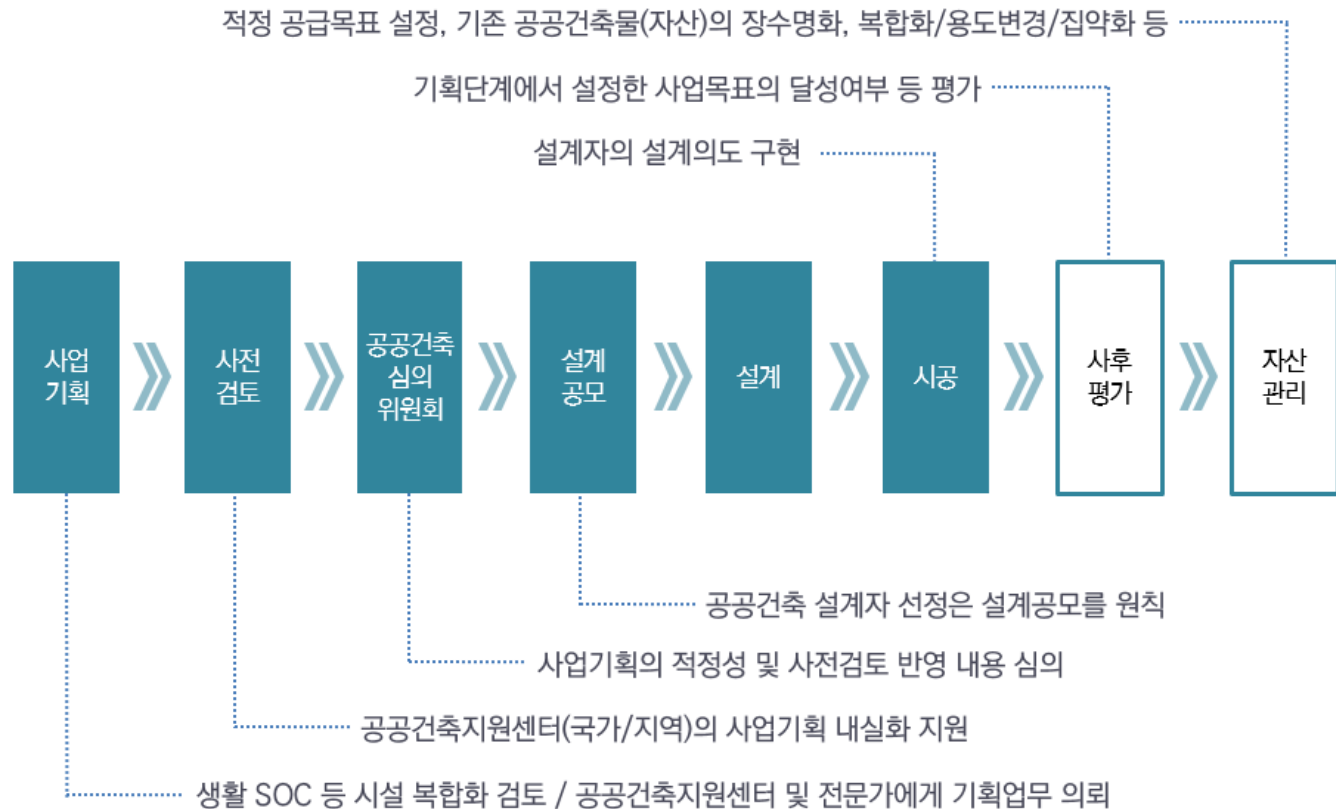
→ 사업 단계별 디자인 절차 혁신

- 좋은 설계자 선정으로 설계의도 변질없이 높은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신축 및 기존 노후건축물, 소형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개선 정책 확대

■ 주요 내용

사업 단계별 디자인 절차 혁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2019)

→ 부처 지역개발·생활SOC 사업의 현장실행력 제고

- 공공건축 협업·지원체계 마련
- 5개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성공사례화 추진
-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범정부협업체 구성

■ 주요 내용

협업 · 지원체계 마련

디자인 개선절차가 사업현장까지 제대로 적용되도록 **협업·지원체계 마련**

- ◆ 국토부, 행안부, 조달청, LH 등이 각각 운영 중인 **설계공모 운영 원칙 통합**
-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건축디자인업무기준**」 개정(7월 完)

*① 설계비 1억 이상 생활SOC와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위촉·활용

② 지역개발사업 內 개별 건축물 설계가 하청되지 않도록 별도 발주

③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자 시공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 관련, 의무 적용(설계비 1억 이상) 외 대상도 실시를 권장

– 각 부처 사업별 시행지침 또는 관계법령에 업무기준 반영 추진

- ◆ 지속적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한 (가칭)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2019)

→ 부처 지역개발·생활SOC 사업의 현장실행력 제고

- 공공건축 협업·지원체계 마련
- 5개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성공사례화 추진
-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범정부협약체 구성

■ 주요 내용

시범사업 선정 성공사례화

도시재생 등 상징성·파급력 큰 5개 시범사업을 선정, 성공사례화 추진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범정부 협약체 구성

관련 부처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간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범정부협약체」를 구성, 사업과정의 협업과 현장밀착 지원을 통해 성과 조기 실현

감 사 합 니 다